

지급사고 후폭풍...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규제 강화' 가닥

6일 오지급에 전산·장부 허점 부각
금융위·금감원, 2단계법 논의 착수
보유자산 외부감사·정기 점검 검토
스테이블코인·지분규제 논의 재점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뉴시스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

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며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산 1호안 발표 임박... 금융·세제 지원 가이드라인 나온다

정부 “이달 말 발표 가능” 언급
롯데·HD현대 대산 합병안 핵심
첫 선례로 산단 재편 기준 정리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1호 자율 구조조정안이 이달 말 발표될 수 있다는 정부 언급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관심이 첫 산업 재편안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된 만큼 이번 1호 재편안을 계기로 산단별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업 재편 논의가 비교적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며 이달 말 1호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세부 조율이 이어지며 일정이 다소 늦춰졌고 현재는 최종 정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재편안이 확정되면 구조조정 이행을 뒷받침할 금융·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대산산단은 석유화학 업계에서 자율 구조조정 논의가 가장 구체화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동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금

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다려 왔다.

양사는 충남 서산 대산 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합병하는 방안을 재편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산산단 내 에틸렌 설비에서 약 110만톤 규모의 감축 효과를 도출하고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가동률 조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적자 폭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병 이후 법인의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안건이

확정될 경우 대산산단 재편은 석유화학 업계 자율 구조조정의 첫 공식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 1호 재편안이 개별 기업의 손익보다 구조조정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명확한 선례와 기준이 없어 논의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첫 사례의 정리방식이 이후 산단별 재편 논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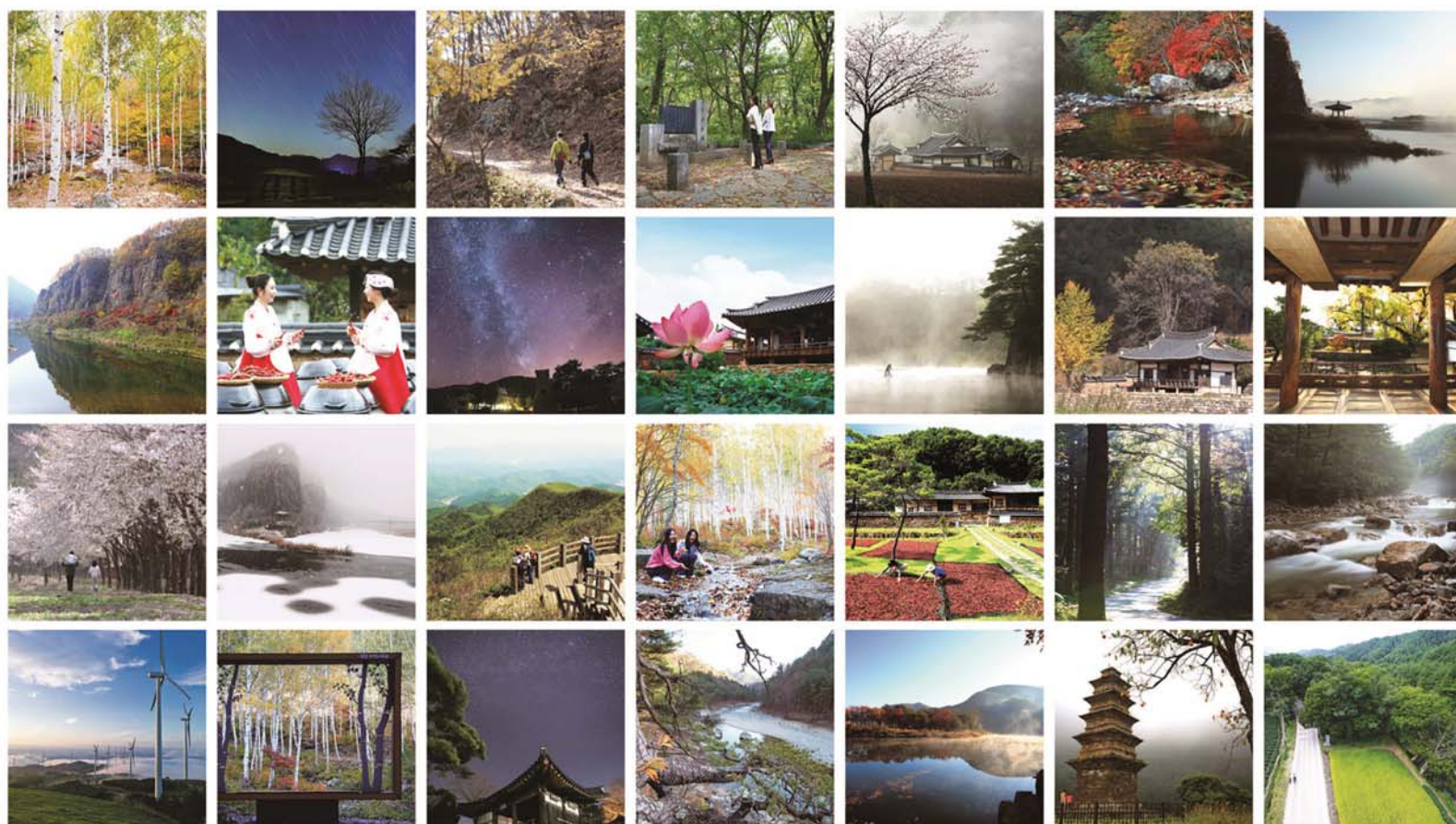
실제로 울산과 여수 산단에서는 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사업 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산단에서는 SK지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스오일 등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설비 통합과 운용 효율화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주말!
영양가 있는~ 생활!

